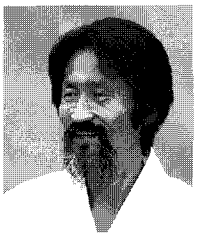
국민과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 농업통상협상 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작년 멕시코 칸쿤에서 'WTO가 농민을 죽인다' 고 외치며 한국의 이경해 농민이 자결한지 1년이 흘렀다. 아직도 그 때의 그 외침이 생생하건만 여전히 WTO는 우리 농업의 숨통을 죄여오고 있다. 그가 죽음으로써 전 세계에 울렸던 경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건만 우리 농민의 위기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이경해 농민이 목숨을 끊은 이유는 WTO가 세계화, 자유화라는 미명하에 강대국만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국을 비롯한 제3세계 약소국 농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UR협정으로 인해 전세계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커졌고, 농업의 경우에도 수출국에만 유리한 협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농산물 수입국의 경우 식량안보가 심각할 정도로 위태로워졌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003년 식량자급율이 26.9%까지 떨어짐으로써 하루 세끼중 두끼를 외국에 의존하는 비상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WTO 였으며, 이를 절감했던 이경해 농민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새로운 WTO뉴라운드, DDA협상을 결단코 저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 이경해 농민의 죽음이 있은지 1년이 지난 오늘, 우리 민족은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이라는 민족적 위기 앞에 또다시 놓여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DDA 농업협상은 지난 7월 31일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기본골격이 결정되었다.

이번 협상의 타결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던 DDA협상을 파국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단 협상을 지속하자는 궁여지책의 산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의 DDA협상 일정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 5차 WTO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협상을 타결짓고 올해 각국의 이행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협상한 후 200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뉴라운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각국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칸쿤에서의 5차 각료회의는 무산되었고, 이후 협상의 진로는 더욱 불투명해졌으며, 미국의 대선과 EU 집행책임자의 교체가 다가오고 있어, DDA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심어줄 정도였다.

이러한 가운데 협상시한을 내년 6차 WTO 각료회의 때까지로 연기하고, 다시 세부원칙 협상을 시작하자는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쌀 재협상은 지난 5월 6일 미국을 필두로 총 9개국과 시작되어 3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쌀 재협상에 대해서 정부는 애초의 약속과는 달리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식적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협상 상대국들이 쌀 이외의 타품목에 대한 개방까지 연관시키려 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민족적 위기 앞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협상에 과연 문제는 없는가?

지난 7월 16일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 의장이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될 초안을 발표하였다.

국내에도 초안의 내용과 이 초안에 대한 협상이 7월 27일부터 있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달되었다.

향후 DDA 농업협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협상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인도, EU,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이것이 세계 언론을 타고 국내에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그런데 식량수입국으로서 협상의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리 정부는 7 월25일 농림부 차관을 중심으로한 협상단이 제네바로 떠날 때까지 그 어떤 여론 수렴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에게조차 이미 협상이 시작된 이후인 7월28일에서야 오시마초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회의를 갖기에 이르렀다.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아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쌀재협상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 28일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농민들과)함께 우리 쌀을 지킬수 있는 방법을 터놓고 얘기하겠다', '협상 과정에서 상대편 요구조건도 1차와 2차, 3차로 나눠가며 가급적 모두 공개하고 적극 이해를 구하겠다' 말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 달랐다. 지금 현재 3차협상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협상의 내용은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 '상대국과의 견해차이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다' 는 정도의 농림부 보도자료 내용 밖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초부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상임위원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라면 비공개로라도 업무보고를 하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농림부는 지금껏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지난 8월 13일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YMCA,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전농 등 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밀실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농민들이 진행중인 쌀개방 찬반에 대한 농민투표에 대해 정부가 6월 15일자로 각 시도에 장관 명의의

협조공문을 보내 "일부 지역에서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을 왜곡하는 쌀개방 찬반투표가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 투표행위는 현재 진행중인 쌀협상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에게 잘못 전달될 우려가 높다"며 "설득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민족적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내적으로 이렇게까지 믿음이 형성되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농민투표가 농민계층의 자주적인 의사표현이자 권리로 국가권력이 이를 방해하거나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또한 농민들의 이 같은 투표행위는 '우리 농민의 쌀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잘 알려주는 행위'로서 협상에 임하는 정부에게도 힘을 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읍면, 이장에게 까지 공문을 보내어 '설득' 토록 하는 행위를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적 열망속에 출발한 17대 국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

국민의 대표임을 자부하면서도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한지 몇 달이 되지 않았지만 항상 이같은 의문속에 국정에 임하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각종 공약을 남발하면서 농민표를 모으던 양당이 17대 국회 첫 대표연설에서 민족적 위기에 놓여 있는 농업농촌과 관련한 문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몸서리쳤던 일, 큰 기대를 갖고 임했던 첫 번째 상임위 활동에서 13개 기관의 업무를 2박 3일동안 그것도 오후시간에 한정하여 의원당 7분밖에 질의할 수 없었던 상황,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비해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의 모습은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어떻게 민족적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인가?

정부-국회-농민-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일본은 이번 DDA협상에서 농민단체를 대표한 농협과 전직 관료출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가 3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입장을 확정하였다.

또한 일본은 협상기간내내 제네바 WTO 사무국 부근의 호텔인 노보텔에 아예 캠프를 차려놓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각각 별도의 일정을 잡아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공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냈다고 한다.

일본은 농수상과 경제산업상 등 2명의 각료를 비롯 전현직 관료 출신을 포함한 자민당 국회의원 8명, 전국농협중앙회(전중)를 포함한 농민단체 관계자 80명이 참석하여 세를 과시했다고 한다.

이 뿐아니라 일본의 신문과 방송들은 제네바 상주 특파원 외에도 파리 특파원과 됴쿄 본사 기자들을 보내 취재에 열을 올렸다고 한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에 비해 열세에 몰려있는 한국은

정부협상단과 NGO대표로 참석한 김충실 경북대 교수만이 참여했으며 국내 여론의 관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참으로 대비되는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신뢰를 주어야 한다.

그동안 각종 통상협상에서 정부는 농민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 굳이 10년전 UR협상을 말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만도 2002년 한중 마늘 비밀협상파문, 학교급식법에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둘러싼 논란 등 국민의 건강과 이해가 직결된 통상협상에서 정부는 사대적 통상자세에 대해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하였기에 많은 학자들과 농민단체들이 투명한 협상, 열린 협상을 요구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정부가 과거의 협상태도를 버리고 전향적 자세로 협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민적 힘을 하나도 모으는 길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대로된 협상을 해보지도 않고 '어쩔수 없다'는 식의 개방론을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통상관료들, 이에 편승하여 평상시에는 농업에 대한 기사한줄 보이지 않다가 '개방 불가피'를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는 국민적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다.

도대체 DDA협상에서 농민들만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나라가 어디있단 말인가?

농민들의 자주적 의사의 결집이 필요하다. 농민이 시장과 제도에서 자주적으로 교섭하고 대응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민의 자주적 운동 조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쌀 재협상을 성공할 수 없다. 농민의 자주적 조직화를 억누른 것이 이제는 농업정책과 국민경제와 대외 협상의 장애가 되고 있다. 농협과 농민단체의 자주성을 바르게 북돋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또한 DDA협상과 쌀 재협상의 시작과 타결이 우리 농업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새로운 농업의 틀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웰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그 근본인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모순이 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